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I. 대상범죄

1.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률 규정

가. 형법상 규정

죄명	적용법조	법정형
①공무집행방해 ②직무강요	형법 §136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137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법정 또는 국회의원모욕	형법 §138	징역 3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인권옹호직무방해	형법 §139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①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②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 개봉 ③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140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140의2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형법 §141①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형법 §141②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형법 §142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미수범	형법 §143	
특수공무방해	형법 §144①	법정형의 1/2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144②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무방해치사	형법 §144②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나. 개별법상 규정

1) 공직선거법

- 선거사무관·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244조)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소방기본법

- 소방차의 출동, 사람 구출, 소화활동 방해(제50조) :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 소방공무원의 처분 방해 등(제51조) : 징역 3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3) 식품위생법

- 공무원의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제97조) :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4) 약사법

- 공무원의 물품회수·폐기처분을 거부·방해·기피(제94조 제1항 제11호) :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중독판별검사등을 거부·방해·기피(제63조 제1항 제5호, 제8호) :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 공무원의 검사·수거·압류·처분·임검등을 거부·방해·기피(제64조 제8호, 제11호, 제13호) :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6) 문화재보호법

-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기피, 거짓 자료 제공(제113조) :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7) 항만법

-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처분을 거부·방해(제97조 제8호) :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8) 아동복지법

-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제41조 제2호)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9) 외국환관리법

- 공무원의 업무검사를 거부·방해·기피(제32조 제1항 제7호) :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제39조)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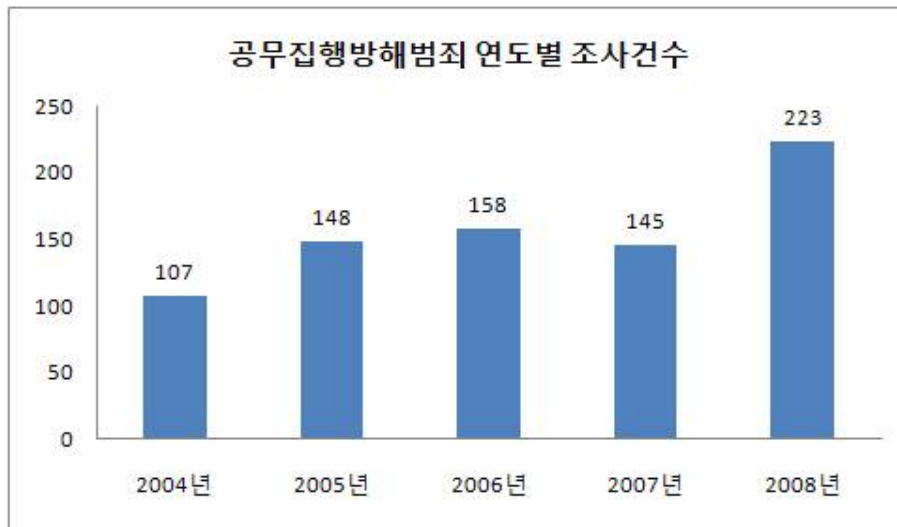
- 긴급안전점검 거부, 기피, 방해(제79조)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2. 통계자료

- 양형기초자료조사{2004.부터 2008.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동종경합범을 포함한 단일범)의 피고인 14,640명에 대한 사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분류된 피고인 781명의 연도 및 죄명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세부죄명		선고연도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무집행방해	수	59	82	104	89	158	492
	비율	12.0%	16.7%	21.1%	18.1%	32.1%	100.0%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15	31	23	12	25	106
	비율	14.2%	29.2%	21.7%	11.3%	23.6%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	수	15	12	16	27	25	95
	비율	15.8%	12.6%	16.8%	28.4%	26.3%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	18	23	15	17	15	88
	비율	20.5%	26.1%	17.0%	19.3%	17.0%	100.0%
전체	수	107	148	158	145	223	781
	비율	13.7%	19.0%	20.2%	18.6%	28.6%	100.0%



3.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대상범죄 선정 원칙

-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빈도, 징역형 선고비율 등을 고려
-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검토

나. 구체적 검토

1)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 형법 제138조

- 법원 재판 및 국회 심의 등 특수한 공무에 대한 방해 목적의 모욕 또는 소동으로 행위 대상, 목적 및 태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사건발생빈도도 그다지 높지 않음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형법 제139조

- 형법 제139조는 본질적으로 징계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입법론적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음
- 실무상 형법 제139조는 거의 의율되지 않음(최근 10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 중 검색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형법 제140조

- 공무상봉인등무효죄(제1항), 공무상비밀봉합등개봉죄(제2항) 및 공무상비밀문서등내용탐지죄(제3항)가 해당되는바, 모두 공무원의 특정직무행위에 관하여 그 집행 후에 있어서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그 중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도 적음(최근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 중 검색된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약 7건 정도인데, 그 중 단일범은 1건에 불과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형법 제140조의2, 제142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 제140조의2), 공무상보관물손상죄(제142조)를 공무집행방해의 장에서 규정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 위 죄들은 강제집행 또는 보관의 대상이 된 자신의 물건에 대한 범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의 가중형태에 불과함
- 실무상 의율되는 경우도 별로 없음(최근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 중 검색된 사건은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12건 정도인데, 그 중 단일범은 2건에 불과함)
-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미수범

- 제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살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 대하여 미수범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미수범은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미수범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 설정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미수범 기준 설정은 보류하는 것이 적절함

2) 개별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

- 개별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교란, 검사·출입·수거·압류의 거부·방해행위 등으로 폭행·협박 이외의 다양한 방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구성요건 및 대상 공무원이 개별법마다 다르고, 법정형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에 따른 죄질도 매우 다양함
- 사건발생빈도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음
- 개별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3)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따라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공용물무효·파괴죄(제141조 제1항, 제2항), 특수공무방해 및 치사상죄(제144조 제1항, 제2항)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삼는 것이 타당

다.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

■ 문제의 소재

-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는 경우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
- 일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무효·파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일반공무집행방해 또는 공용물무효·파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임

■ 양형기준 적용대상 포섭 여부에 관한 견해

- 상해죄의 법정형(7년 이하, 중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보다 높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원칙에 따라 형이 중한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이를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특수공무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규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들 수 있음
- 상해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서 상해를 포함시킨다면, 나중에 설정될 상해죄의 양형기준과 형평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키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용이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 수 있음
- 폭행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당한 빈도로 상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양형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폭행형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
-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수단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한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특수공무방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양형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손해나 중한 해를 제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고 일반인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들 수 있음

- 추후 손해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그에 맞게 수정하면 손해죄 양형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 수 있음

■ 검토

-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폭행형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전부 제외하여 손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다고 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손해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범죄가 양형기준의 포섭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모든 손해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다양한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양형기준을 작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특히 중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범위가 일반적 공무집행방해죄와 큰 차이가 나며, 추후 손해죄의 양형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따름
- 이론적으로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 형이 낮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형이 높은 범죄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 특수공무방해 과정에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양형기준에서 규율하면서 일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를 제외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손해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의 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단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삼기로 함

II. 범죄유형 분류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 또는 일정한 물건이나, 보호의 객체는 공무 그 자체임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범죄의 경우, 입법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법정형으로 세분화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 대인형 공무집행방해

- 폭행·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

- 직무강요(제136조 제2항)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 제1항)

- 대물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제141조 제1항)

- 공용물파괴(제142조 제2항)

- 특수공용물무효·파괴(제144조 제1항)

- 특수공무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무효·파괴치상(제144조 제2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용물무효·파괴치사(제144조 제2항)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보호법익, 특성,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국 연방

- 미국 연방양형기준(2009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은 타인에 대한 폭행(Offences Against the Person)의 장에 공무원에 대한 방해죄(Obstructing or Impeding Officers)를 규정함

- 기본 등급은 10등급이며,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한 경우에는 3등급을 가중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등급을 가중함. 단, 상해가 위 장에 규정된 가중된 폭행에 해당하면 그에 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함

- 그 밖에 사법절차를 방해한 경우(Obstruction of Justice, 사법절차 방해의 장에 규정됨)에는 기본 등급은 14등급이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8등급을 가중함

나. 영국

- 영국은 공무집행방해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체포저항 목적 폭행죄(Assault with intent to resist arrest)는 대인공격법(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81)에서, 경찰에 대한 폭행죄(Assault on a

police constable in execution of his duty)는 경찰법(Police Act 1996)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가중사유에 해당됨

- 체포저항 목적 폭행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2년{형사법원(Crown Court)의 경우}과 징역 6월{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의 경우}임. 경찰에 대한 폭행죄의 법정형 상한은 6월(치안법원 관할)임
- 체포저항 목적 폭행죄는 보통 사인에 의한 체포 저항의 경우가 적용되며, 경찰에 의한 체포인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폭행죄가 적용됨
-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중된 법조항과 양형기준이 적용됨
-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 양형위원회(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의 양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단,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다른 가중된 양형기준이 적용됨

행위유형/성질	형량 출발점	형량범위
경미한, 영구적인지 않은 상해를 야기한 지속적인 폭행	18주	사회내 처우(상)-24주
경미한, 영구적인지 않은 상해를 야기한 폭행	사회내 처우(상)	벌금-18주
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폭행	사회내 처우(하)	벌금-사회내처우(중)

추가 가중인자	추가 감경인자
도망, 머리로 들이받기, 발로차기, 물기, 흉기 휴대	체포가 불법하다고 믿은 경우

다. 독일 형법

- 독일형법은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Widerstand gegen die Staatsgewalt)에서, 공연한 범죄선동과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도주원조, 특수도주죄를 규정함
-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장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주거침입, 소요, 범죄단체조직, 공직사칭, 범죄불고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공무집행공무원에 대한 저항(§113)의 가중 형태는 다음 표와 같음

일반공무집행저항(§113①)	가중공무집행저항(§113②)
폭행, 폭행을 고지한 협박에 의한 저항, 사실상 공격	무기휴대, 피공격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을 야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5d)의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보관물파괴(§ 133)의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관청의 고시침해(§ 134)의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강제처분표시파괴 등(§ 136)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공용물 손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공공기업의 교란죄(§ 316b)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기관(연방의회, 연방·주정부, 헌법재판소, 입법기관)에 대해 강요 등을 한 경우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죄 장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라. 프랑스 형법

- 프랑스 형법은 제3장 사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무침해에서, 뇌물제공, 공무에 대한 협박 및 방해, 공물손괴 등의 죄, 공무원모독, 공무집행저항, 공공사업집행저항, 공무집행개입, 공무자격표시 부정사용, 자격부정사용, 자격부정게재, 민사신분침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공무집행저항(§ 433-6 조 이하)의 가중형태는 다음 표와 같음

공무집행저항 §433-7①	집단공무집행저항 §433-7②	무기공무집행저항 §433-8①	집단&무기공무집행저항 §433-8②
1년 및 15,000유로	2년 및 30,000유로	5년 및 75,000유로	10년 및 150,000유로

- 공무방해위협(§ 433-3)의 경우에는 협박한 경우(①항) 2년 및 30,000유로, 협박의 정도가 살해 또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재산침해와 관련될 때(②)에는 5년 및 75,000유로, 유리한 결정을 얻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의 영향력을 남용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 또는 사용하는 행위(③항) 등의 경우에는 10년 및 150,000유로에 처함
- 공물손괴 등(§ 433-4)의 경우에는 7년 및 100,000유로에 처하고, 그밖에 공무원모독죄와 공무집행개입죄를 규정하고 있음

마. 일본 형법

- 제5장에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규정
- 일본 형법 제95조(공무집행방해 및 직무강요)는 우리 형법 제136조와 거의 동일하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우리 형법보다 낮음
- 제5장에서 그밖에 제96조(봉인 등 파기), 제96조의2(강제집행방해), 제96조의3(경매등방해)를 규정
- 제40장 회기 및 은닉의 죄 장 제258조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을 회기한 자는 3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바. 오스트리아 형법

- 제19장 국가권력에 대한 죄 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 제269조 제1항은 ‘관청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협박으로,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또는 위협한 협박으로, 직무행위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되, 중강요(제106조)의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0조①은 공무원을 그 직무행위(제269조 제3항)중에 폭행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
- 그 밖에 제19장에서는 압류의 무효(제271조), 봉인손괴(제272조), 관청 공지의 훼손(제273조)을 규정
- 제15장 최고국가기관에 대한 죄 장에서는, 연방대통령에 대한 폭행·협박을 통한 직무강요죄(제249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국민의회, 연방상원,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의회, 주정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최고법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통한 직무강요죄(제250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국민의회, 연방상원,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의회, 주정부, 헌법재판소, 행정재판소, 최고법원의 구성원이나 감사원장, 주 감사원장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통한 직무강요죄(제251조,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중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를 규정
- 오스트리아 형법의 폭행·협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의 가중 형태와 폭행·협박을 통한 직무강요의 가중 형태는 아래 표와 같음

공무원 단순 공격 §270	관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수행방해 §269①전문	중강요에 해당하는 공무수행방해 §269①후문
6월 이하 또는 벌금	3년 이하	6월 이상 5년 이하

관청, 공무원에 대한 직무강요 §269②	최고국가기관의 구성원, 대리인에 대한 직무강요 §251전문	연방대통령 등 최고국가기관에 대한 직무강요, §251 본문이 중강요에 해당하는 경우 §249, 250, 251후문
6월 이하 또는 벌금	6월 이상 5년 이하	1년 이상 10년 이하

사. 중국 형법

- 중국 형법에서는 제6장 제1절에서 공공질서교란죄를 규정
-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방해(제277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
- 군중을 선동하여 국가법류, 행정법규의 실시예 폭력으로 항거(제278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가. 선고형 분포

■ 중국 내역

단위: 명

세부죄명		중국내역				전체
		실행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공무집행방해	수	52	153	285	2	492
	비율	10.6%	31.1%	57.9%	0.4%	100.0%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11	41	52	2	106
	비율	10.4%	38.7%	49.1%	1.9%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	수	6	52	34	3	95
	비율	6.3%	54.7%	35.8%	3.2%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	14	74	0	0	88
	비율	15.9%	84.1%	0.0%	0.0%	100.0%
전체	수	83	320	371	7	781
	비율	10.6%	41.0%	47.5%	0.9%	100.0%

-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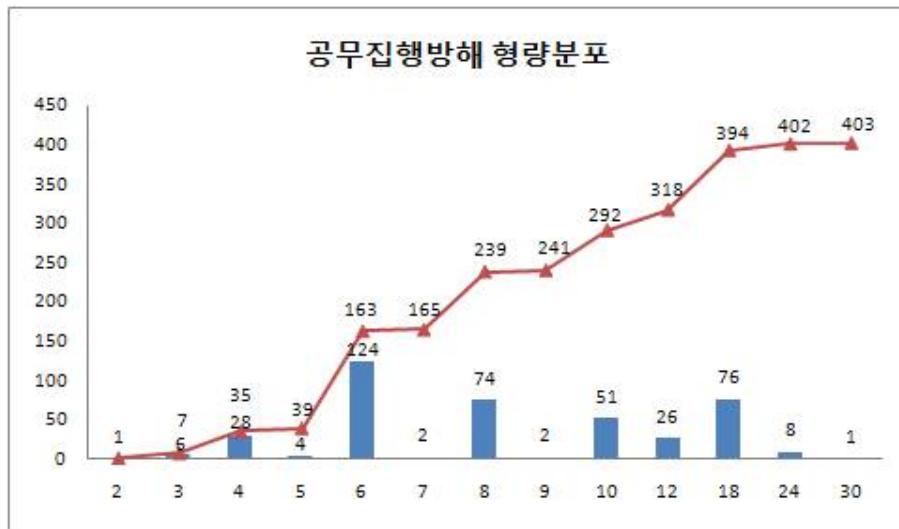
■ 전체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사건명	실행/집행유예	수	평균	표준편차
공무집행방해	실행	52	6.365	2.4815
	집행유예	153	6.765	1.8056
	합계	205	6.663	1.9997
위계공무집행방해	실행	11	10.000	2.0000
	집행유예	41	8.220	2.6973
	합계	52	8.596	2.6514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행	6	9.667	2.6583
	집행유예	52	9.077	3.2228
	합계	58	9.138	3.15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실행	14	18.214	5.3231
	집행유예	74	18.027	2.4882
	합계	88	18.057	3.0714
합계	실행	83	9.084	5.3196
	집행유예	320	9.931	5.1041
	합계	403	9.757	5.1539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7	8	9	10	12	18	24	30	
공무집행방해	수	1	5	27	4	95	0	44	1	23	5	0	0	0	205
	비율	0.5	2.4	13.2	2.0	46.3	0.0	21.5	0.5	11.2	2.4	0.0	0.0	0.0	100.0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0	1	1	0	15	0	11	0	16	7	1	0	0	52
	비율	0.0	1.9	1.9	0.0	28.8	0.0	21.2	0.0	30.8	13.5	1.9	0.0	0.0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	수	0	0	0	0	14	2	19	0	10	9	4	0	0	58
	비율	0.0	0.0	0.0	0.0	24.1	3.4	32.8	0.0	17.2	15.5	6.9	0.0	0.0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	0	0	0	0	0	0	0	1	2	5	71	8	1	8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1	2.3	5.7	80.7	9.1	1.1	100.0
전체	수	1	6	28	4	124	2	74	2	51	26	76	8	1	403
	비율	0.2	1.5	6.9	1.0	30.8	0.5	18.4	0.5	12.7	6.5	18.9	2.0	0.2	100.0

-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81.9%를, 징역 6월 미만이 18.1%를 차지하고, 징역 1년 초과는 한 건도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94.3%를, 징역 6월 미만이 3.8%를, 징역 1년 초과가 1.9%를 차지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93.0%를 차지하고, 징역 6월 미만은 한 건도 없으며, 징역 1년 초과가 6.9%를 차지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건의 경우, 징역 1년 6월이 80.7%를, 징역 1년 6월 미만이 9.1%를, 징역 1년 6월 초과가 10.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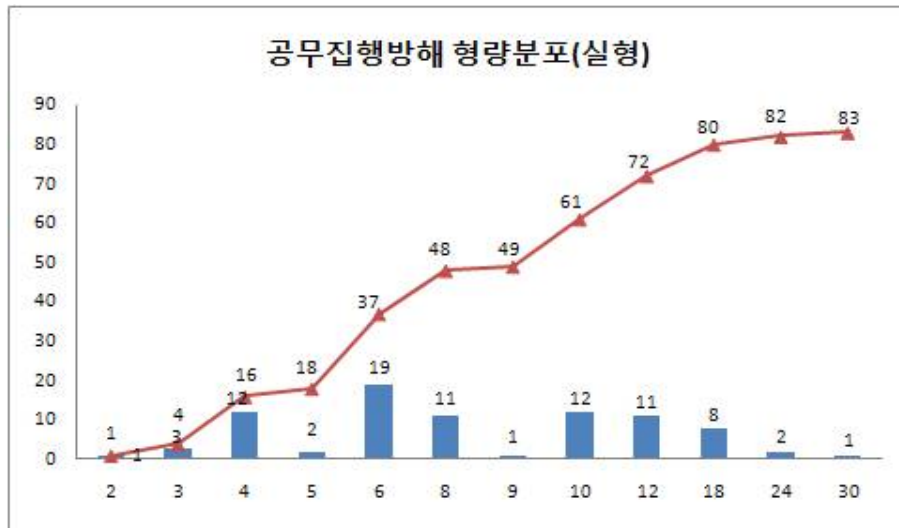


■ 징역형 실행 시 형량 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8	9	10	12	18	24	30	
공무집행 방해	수	1	3	12	2	17	7	0	8	2	0	0	0	52
	비율	1.9	5.8	23.1	3.8	32.7	13.5	0.0	15.4	3.8	0.0	0.0	0.0	100.0
위계공무 집행방해	수	0	0	0	0	1	2	0	4	4	0	0	0	11
	비율	0.0	0.0	0.0	0.0	9.1	18.2	0.0	36.4	36.4	0.0	0.0	0.0	100.0
특수공무 집행방해	수	0	0	0	0	1	2	0	0	3	0	0	0	6
	비율	0.0	0.0	0.0	0.0	16.7	33.3	0.0	0.0	50.0	0.0	0.0	0.0	100.0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	수	0	0	0	0	0	0	1	0	2	8	2	1	14
	비율	0.0	0.0	0.0	0.0	0.0	0.0	7.1	0.0	14.3	57.1	14.3	7.1	100.0
전체	수	1	3	12	2	19	11	1	12	11	8	2	1	83
	비율	1.2	3.6	14.5	2.4	22.9	13.3	1.2	14.5	13.3	9.6	2.4	1.2	100.0

-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65.4%를, 징역 6월 미만이 34.6%를 차지하고, 징역 1년 초과는 한 건도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100%를 차지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100%를 차지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건의 경우, 징역 1년 6월이 57.1%를, 징역 1년 6월 미만이 21.4%를, 징역 1년 6월 초과가 21.4%를 차지함



■ 집행유예 선고의 본형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3	4	5	6	7	8	9	10	12	18	24	
공무집행방해	수	2	15	2	78	0	37	1	15	3	0	0	153
	비율	1.3	9.8	1.3	51.0	0.0	24.2	0.7	9.8	2.0	0.0	0.0	100.0
위계공무집행방해	수	1	1	0	14	0	9	0	12	3	1	0	41
	비율	2.4	2.4	0.0	34.1	0.0	22.0	0.0	29.3	7.3	2.4	0.0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	수	0	0	0	13	2	17	0	10	6	4	0	52
	비율	0.0	0.0	0.0	25.0	3.8	32.7	0.0	19.2	11.5	7.7	0.0	1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	0	0	0	0	0	0	0	2	3	63	6	7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2.7	4.1	85.1	8.1	100.0
전체	수	3	16	2	105	2	63	1	39	15	68	6	320
	비율	0.9	5.0	0.6	32.8	0.6	19.7	0.3	12.2	4.7	21.3	1.9	100.0

4. 구체적 유형화 방안

가. 공무집행방해

■ 설정방식의 개요

-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수단 및 태양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②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가중적 구성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처리하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유형의 구분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

☞ 구체적 발현 형태 : 집단시위,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음주단속 과정, 현행범 체포 과정, 범죄예방·질서유지 과정, 지구대에서의 소란행위), 그 밖의 공무원(철거시행 중인 구청공무원, 계호업무 중인 교도관, 청원경찰 등 주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형법 제136조 제2항)

● 제2유형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구체적 발현 형태 : 시험관련 부정행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자백·진술¹⁾,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인·허가²⁾

1) 판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67 판결)

2) 판례는,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나. 공용물무효·파괴

■ 설정방식의 개요

- 객체 및 행위태양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형법상 특수공용물무효·파괴의 가중적 구성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은 각 유형별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처리하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유형의 구분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 공용서류등무효(형법 제141조 제1항)
- 제2유형(공용물파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 공용물파괴(형법 제141조 제2항)

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설정방식의 개요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2개의 유형(치상/치사)으로 구분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유형의 구분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특수공무방해치상(형법 제144조 제2항)
-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 특수공무방해치사(형법 제144조 제2항)

5. 형량범위

가. 개요

▣ 형량범위 설정상 고려사항

- 해당 유형의 공무방해에서 발현되는 전형적 위험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구분된 유형에 다양한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형량을 정하여야 할 것임
- 양형실무에 대한 경험적 분석,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형량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별 형량범위에 있어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형량범위 설정의 출발점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5년 이하의 법정형이 많고, 형량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등 유형의 선고형은 주로 징역 2월~1년 6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특수공무방해치상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선고형은 주로 징역 9월~2년 6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특별양형인자의 개수 비교에 따라 유형별 영역 및 권고형량범위가 결정되는바, 개별 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 내에서 영역 간 형량범위 중첩을 허용함

나. 유형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

- 형량범위나 유형구분에 참조할 형량은 징역형 전체 형량분포보다 징역형 실행 선고시 형량분포를 기초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아래 통계수치는 실행선고 사건에 관한 것임

2) 공무집행방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8	9	10	12	18	24	30	
공무집행방해	수	1	3	12	2	17	7	0	8	2	0	0	0	52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8	9	10	12	18	24	30	
	비율	1.9	5.8	23.1	3.8	32.7	13.5	0.0	15.4	3.8	0.0	0.0	0.0	100.0
위계공무 집행방해	수	0	0	0	0	1	2	0	4	4	0	0	0	11
	비율	0.0	0.0	0.0	0.0	9.1	18.2	0.0	36.4	36.4	0.0	0.0	0.0	100.0
특수공무 집행방해	수	0	0	0	0	1	2	0	0	3	0	0	0	6
	비율	0.0	0.0	0.0	0.0	16.7	33.3	0.0	0.0	50.0	0.0	0.0	0.0	100.0

-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65.4%를, 징역 6월 미만이 34.6%를 차지하고, 징역 1년 초과는 한 건도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100%(집행유예까지 포함한 전체 형량분포에 의하면, 징역 1년 초과가 1.9%를 차지함)를 차지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가 100%(집행유예까지 포함한 전체 형량분포에 의하면, 징역 1년 초과가 6.9%를 차지함)를 차지함

3) 공용물무효 · 파괴

-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가 없음

4) 특수공무방해치상 · 치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8	9	10	12	18	24	30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	수	0	0	0	0	0	0	1	0	2	8	2	1	14
	비율	0.0	0.0	0.0	0.0	0.0	0.0	7.1	0.0	14.3	57.1	14.3	7.1	100.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건의 경우, 징역 1년 6월이 57.1%를, 징역 1년 6월 미만이 21.4%를, 징역 1년 6월 초과가 21.4%를 차지함

다. 형량범위 설정의 접근방식

1) 개요

- 유형에 따른 선고형 분포의 통계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별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되, 양형기초자료의 대상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용물무효·파괴의 경우는 경험적 방식에 따른 형량범위 설정이 곤란하고, 기존의 양형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에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음
- 공무집행방해 유형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선고형은 징역 2월~1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선고형은 징역 6월~1년 사이(징역형 전체 분포에 의하면, 징역 3월~1년 6월)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선고형은 6월~1년 사이(징역형 전체 분포에 의하면, 징역 6월~1년 6월)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공무방해의 법정형이 기본범죄 법정형을 1/2까지 가중한 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다 엄중한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가중영역에 해당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공용물무효·파괴의 경우, 양형기초자료조사의 대상사건이 없어서 통계분석결과를 활용할 수는 없으나, 공용물무효의 법정형(7년 이하)이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5년 이하)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점, 공용물파괴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이 공용물무효의 법정형(7년 이하)보다 높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경우, 선고형의 다수가 법정형 하한을 감경한 1년 6월에 집중되어 있으나, 행위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특수공무방해치사의 경우, 양형기초자료조사의 대상사건이 없어서 통계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없으나, 특수공무방해치사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이 특수공무방해치상의 법정형(기본범죄의 1/2 가중)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임

2) 유형 및 영역별 권고형량범위의 검토

▣ 공무집행방해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1유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실행 선고

형이 징역 2월~1년 사이에 분포하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실행 선고형이 징역 6월~1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제1유형에 있어서는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을 상당 부분 포섭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6월~1년 4월, 감경영역을 8월 이하로 설정하되, 공무집행방해과정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당 정도 포섭할 수 있게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1년~4년으로 설정하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8월~1년 6월, 감경영역을 4월~10월, 가중영역을 1년~3년으로 설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종래 양형실무의 대부분을 포섭할 수 있을 것임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으로써 형량의 규범적 상향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및 제2유형의 대상사건에 관한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가 없어서 활용할 만한 통계분석결과가 없는 실정임
- 다만, 제1유형보다 제2유형의 법정형이 높고 죄책이 무거운 점, 제1유형의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보다 다소 높긴 하나, 제1유형의 경우 경미한 공용서류 손상에서 중요한 기록의 손상에 이르기까지 행위태양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가벌성 범위 역시 넓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제1유형의 기본영역은 6월~1년 6월로 정하고, 감경영역은 8월 이하, 가중영역은 1년~3년으로,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10월~2년 6월, 감경영역은 6월~1년 6월, 가중영역은 2년~5년으로 정함이 타당함

■ 특수공무방해치상·치사

- 통계분석결과에 의하면, 제1유형 해당 사건 선고형의 대부분이 1년 6월에 집중되어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인 점, 행위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기본영역은 2년~4년, 감경영역은 1년 6월~3년, 가중영역은 3년~6년으로 설정함
- 제2유형의 대상사건에 관한 양형기초자료조사결과가 없어서 활용할 만한 통계분석결과가 없는 실정이나, 제1유형보다 법정형이 높은 점, 공무

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결과불법이 훨씬 중대한 점, 다른 치사범죄와의 죄질 비교 및 형량범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기본영역을 5년~8년, 감경영역을 3년~6년, 가중영역을 7년~10년으로 설정하기로 함

라. 형량범위의 설정(안)

- 위에서 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형 및 영역별 권고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2) 공무집행방해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8월	6월-1년4월	1년-4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3) 공용물무효·파괴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용물무효	-8월	6월-1년6월	1년-3년
공용물파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4)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6년	5년-8년	7년-10년

Ⅲ. 양형인자의 결정

1. 통계분석결과

-
- 별지 통계분석결과 참조

2. 양형인자 추출(안)

가. 양형인자 정리

1)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공범의 수,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피해자 수)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여부), 이종 누범(이종전과 유무)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계획적 범행,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2) 공용물무효·파괴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누범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계획적 범행,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누범,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3) 특수공무방해치상·치사

■ 특별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자수(자수·자복 여부), 동종누범(동종전과 유무 및 수)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중한 상해,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 일반양형인자

- 경험적 수치에 의한 양형인자
 - 심신미약(피고인 음주)
- 규범적 관점에 의한 양형인자
 -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행전과

3. 양형인자 정리

가.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제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권한 및 법률상 방식을 갖추긴 하였으나, 공무집행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거나 공무원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를 의미함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공무방해로 인하여 공무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는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의미함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나.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 특수공무방해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제2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 자 /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인자의 정의]

-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제2유형)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IV.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자수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1. 개요

- 집행유예 여부는 피고인의 재범의 가능성, 실행집행의 필요성, 집행을 유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각종 양형인자와 징역형의 집행 여부 사이에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결정시 참작할 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출함
- 제1기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안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참작사유를 기초로 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의 특유의 참작사유를 추가하여 집행유예기준안을 작성함

-
- 주로 특별양형인자를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되, 집행유예의 결정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일반양형인자 또는 다른 사유도 주요참작사유에 포섭하여 설정함

2. 참작사유의 내용

가. 주요부정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유형 및 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주요참작사유로 반영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공무방해로 인하여 공무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는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의 방해라는 결과 불법 또는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형권고의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은 양형인자표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적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실형권고의 참작사유로 설정함
 - 반복적 범행 역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실형권고의 참작사유로 설정함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공무방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역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형권고의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 동종전과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를 말함
 - 제1기 양형기준의 집행유예기준에서 전과시기가 10년 이내인 경우(살인미수, 뇌물공여, 성범죄)와 5년 이내인 경우(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가 혼용되고 있음
 - 위증, 무고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 대체로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음
 - 벌금형 동종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하여 동종전과에 포함시킴

나.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양형인자표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그대로 집행유예기준에서 주요긍정사유로 설정
-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양형인자표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그대로 집행유예기준에서 주요긍정사유로 설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긍정사유
 - 양형자료 분석결과에서도 초범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의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남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긍정사유
 - 양형자료 분석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가 집행유예 결정의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남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긍정사유

다.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약물중독·알코올중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부정사유를 채택하여 공무원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기준에서 일반부정사유로 규정

라. 일반긍정사유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현행 양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공정사유를 채택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 집행유예기준에서 일반공정사유로 규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조항]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ㄴ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ㄴ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ㄴ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개별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10067호 2010.3.12 일부개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3.12, 2009.2.12>

소방기본법 제10014호 2010.2.4 일부개정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제51조 (벌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제10191호 2010.3.26 일부개정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18>

2.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 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약사법 제09932호 2010.1.18 일부개정

제9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11. 제7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09932호 2010.1.18 일부개정

제63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8.3.28>

5.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8.3.28>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42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6조 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문화재보호법 제9401호 2009.01.30 일부개정

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5조 제4항 본문(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45조 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항만법 제10252호 2010.4.12 일부개정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제10339호 2010.6.4 일부개정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7.13>

2.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외국환관리법 제05559호 1998.9.16 일부개정

제3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7.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09685호 2009.5.21 일부개정

제39조 (벌칙)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347호 2010.6.8 일부개정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